

“치우치지 않는 마음 가진 충청”... 한동훈, 이틀째 중원 공략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서 간담회
‘상업용 전기요금 체계’ 준비 밝혀
‘캐스팅 보트’ 충북표심 좌우 판단
청년·육아맘 의견 청취 자리 가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충북 청주를 찾아 전날 충남 천안에 이어 이틀 연속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4·10 총선 ‘격전지 순회’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정 모두 충청 지역을 택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청주 상당구에 위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충청에 처음 온 이유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과 정확한 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하는 생각으로 충청에서 출발했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

눈치를 봐야하는 직업이라 생각한다. 그 눈치를 봐서 해드릴 것이 있다면 빨리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치한 지 얼마 안 돼 제가 오히려 순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

인을 위해 ‘상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용은 별도 요금 체계로 산업의 특수성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인용이 없다”며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산업용, 공업용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상업용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우리는 소수당이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분에게 밀리지만 그렇지 않다. 저희는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여당”이라며 “우리가 하면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다”라고 자신했다.

충북은 현재 국민의힘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나눠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말 그대로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방문한 청주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 4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에 패한 곳이기도 하다.

다만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청주 지역구 1석을 탈환한 바 있다.

특히 청주는 8개 충북 지역구 중 4곳이 풀려 있는 지역인 만큼, 청주 표심이 충북 전체를 좌우한다고 보고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오후엔 서원대로 이동해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청년 세대의 어려운 점을 경청했다.

오후에는 청원구 문화제조창에서 ‘육아맘’과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현물 복지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른 곳에 풀릴만한 재원을 이쪽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과격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아이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어머니에게 자기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은 과격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청주 지역에 출마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김진도 후보(충북 청주서원), 김수민 후보(충북 청주청원), 김동원 후보(충북 청주흥덕)와 함께 거리를 돌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조국 “尹 정권 심판 위해 힘 합쳐야”

지역구·비례대표 연대 모색 기대
조국 “검찰독재 조기 종식 등
담대한 캠페인으로 투표 유도”

제22대 총선 야권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손을 맞잡으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뜻을 모았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만나 반갑게 악수했다. 조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돼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진영의 본질”이라고 추켜세웠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연대나 비례대표 연대를 모색하지 않느냐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나온 ▲윤석열 정권과 검찰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비정당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 방안과 계획이라는 당의 활동 방향을 설명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면서 “예컨대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 직선제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 독립 등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경북 지역구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할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나.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의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심판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심판하고자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 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 개가 만 원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를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총선 연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인 신장식 변호사는 “조 대표는 학익진을 말씀하셨다. 앞장서는 배가 있고 본선이 적을 포위하는 학익진처럼 같이 협력하자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 강남·대구·울산 등 5곳에 ‘국민추천제’ 도입

적용 지역구 적어... ‘무감동 공천’

4·10 총선 공천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이 5일 서울 강남 등 5개 선거구에 ‘국민추천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불패’라는 비판을 받자 총선을 36일 앞두고 국민추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적은 지역에 적용돼 ‘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추천 프로젝트’ 대상 선거구를 발표했다. 대상 선거구는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서울 강남갑·을과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구갑, 울산 남구갑 등 5곳이다.

후보는 6일부터 이틀 간 공고를 거쳐, 8·9일 온라인 접수(전자우편)를 받

는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료도 없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제3자 추천도 가능하다”며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가 없는 공천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적극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일 때 진짜 국민의 대표가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후보자는 비(非) 현역의원과 마찬가지로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 적합도(면접)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최종 후보는 오는 15일 발표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진입장벽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이 도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청 자체도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류성걸(대구 동·군위갑)·양금희(대구 북구갑)·이재의(울산 남구갑) 의원 등은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처음 국민추천제가 제기됐을 때 공천 방식을 정하지 못한 지역구가 30여곳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적용 지역구가 적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장 사무총장은 “현역과 경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치 신인에게는 엄청난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혁신선도형 R&D 중심 예산 대폭 확대”

대통령실, R&D 협의체 내주 출범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혁신선도형 R&D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전문가·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혁신선도형 R&D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정부 R&D 중장기 계획과 투자방향, 중점 투자 분야 등을 브리핑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감액에 대한 과학기술계 반발을 언급하며 “감액은 R&D 예산 시스템의 개혁 과정으로,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부터는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투자시스템개

혁과 관련해 “1년이 채 안 됐지만, 문제시된 시스템을 개혁해서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 국가난제 해결 프로젝트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글로벌 R&D 등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실 과기수석실 산하 ‘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 주도로 내주 출범할 ‘혁신선도형 R&D사업 협의체’는 내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3개 부처 5개 혁신선도형 R&D 사업을 엮어 이들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업그레이드가 목적이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